

신재벌정책

재벌공룡 만들기인가

30대 재벌 매출액 GNP 90% 육박...불균형 심각

재벌규제정책인가 재벌육성 정책인가.

정부가 끊임없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와 소유분산, 업종전문화 등의 시책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시키겠다고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재벌들의 경제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업종전문화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문민정부 들어서서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0개 재벌들의 GNP대비 총매출액 비중이 92년의 78.8%에서 82.2%로 2년 사이에 무려 3.4%나 높아졌다. 게다가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조치가 계속 추진될 경우 30대재벌의 매출액은 GNP의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도 실제로는 19개 늘어나 문어발 확장이 대단히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말로는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확장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정부가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전문화정책은 별다른 실효성도 없이 주력기업의 여신제한 조치만 풀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여신규제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의 수혜자도 주로 대기업이었다.

여기에 엄청난 덩치의 공기업 민영화조치가 대기업들의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재벌의 사유화로 결정난 이동통신업종도 연간 수천억의 이윤을 내고 있을 뿐



재벌의 경제력억제정책과 업종전문화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니라, 앞으로 연간 8천억원 내지 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한전과 한국통신 등이 민영화되면 재계의 판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그 결과 재벌들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다. 더구나 최근 김영삼대통령은 유럽순방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재벌총수들과 만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당부하여 친재벌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재벌사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어음부도율이 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경기가 수직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서 부도율이 급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수지도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이 31.5% 증가한 반면 수입도 31.1% 늘어나 적자폭이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국내 산업기반의 파괴로 원료와 부품의 대부분을 일본 등

해외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수출호황이 오히려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로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사이의 격차와 괴리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신재벌정책에 대해 학계와 노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진정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계설비, 핵심부품, 신소재 등을 생산하는 다수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의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재벌위주로 되어있어 국내의 산업기반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의 이필상교수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산업기반의 국적문제"라면서 "이제는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점 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인천노동교육연구원 원장)씨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안논리 대신 경제논리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경영참가 등 노동자의 자발성제고와 삶의 질 향상 없이는 무한경쟁 시대의 경쟁력 강화는 허구"라 말했다.

(송영인 기자)